

#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 대비

도의회, 도내 시군의회  
업무 담당자와 조직 정비 등  
준비사항 공유 업무연찬



전북도의회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내 시·군의회 업무 담당자와 함께 인사와 조직 정비 등 지방자치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10일 실시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내 시·군의회 업무 담당자와 함께 인사와 조직 정비 등 지방자치 준비사항에 대한 업무연찬을 10일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송지용 의장과 김인태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시·군의회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하반기 지방의회가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사무처 전용웅 총무담당관의 도의회 준비계획 등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지용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의 인사권 독립 등으로 올 하반기 도의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급 혼란스럽겠지만 이번 연찬회를 통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상호간

정보도 공유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뀌고, 2023년까지 지방의원 수의 1/2 범위 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유호상 기자



"이석기 석방 거부 문 정부 규탄한다"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을 위한 전북구명위원회가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은 석방, 피해자 이석기의 원은 석방거부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했다.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우수마을 선정

도내 34곳... 무주 급척·고창 청룡마을에 산림청장 표창

전북도가 산림청 주관 '2021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서 도내 34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논밭 두렁,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인정돼 산림청으로부터 우수마을 현판을 전달받았으며, 무주군 급척마을과 고창군 청룡마을에 이장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도내에는 2596개 마을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자율적으로 참여했으며,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이 2589개 마을로 99%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도에 따르면, 올 봄철 도내에 19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원인별로는 입산

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10건(53%),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에 의한 산불이 4건(21%), 성묘객 실화 등 기타 5건(28%)이 발생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작년도 8건과 비교해 5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지난 7월 19일에 발표된 산림청 주관 봄철 산불방지 기관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허건 도 환경복지국장은 "소각행위는 대부분 농·산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산불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산불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므로, 도민 모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과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소상공 온라인 진출 시설·장비 무료 지원

전주시의회-정보문화진흥원  
온라인 판매 진흥 협력기로

전주시의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1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 연말까지 소상공인 판로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을 진행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온라인 매장 개설을 위한 온라인 스토어 개설 교육, 온라인 라이브방송 제작 교육, 디지털 커머스를 활용한 1인 셀러 쇼호스트 교육, 상품 소개 페이지 제작을 위한 소상공인 라이브 방송 제작 지원 사업 등이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커머스 관련 시설 및 장비 무료지원은 물론 수준별 맞춤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다가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싹싹한 씨앗이자 원동력"이라며 "전주는 물론 전북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커머스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구축·운영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최영심 도의원, 노인복지시설서 삼계탕 배식봉사 참여

"어르신들 삼계탕 드시고,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세요"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말복인 10일 전북도노인복지관에서 삼계탕 배식 봉사에 참여해 200여 명의 어르신께 따뜻한 인사와 음식을 건넸다. 이날 어르신들은 "복엽과 외출 자제 권고로 기력이 부족했던 참년에 보양식으로 다시 기운 낼 수 있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북 노인복지관에서 해마다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좋은 취지의 행사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언제나 가교역할에 앞장서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도 좋은 취지로 삼계탕을 후원해주신 '제이콥에프엔비'에 감사드린다"면서 "이후에도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영심 의원은 지난 7월 전북 노인복지관에 '엔에스비트'의 폐지오기 100kg 후원 사업에도 함께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 신복지 정책 일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본격 추진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실시될 경우 이용자들  
의료서비스 질 개선 향상"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인건 선거 캠프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경화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전 국민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대한 가정의학회 등 98개 시민사회단체와 의료계가 참여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목

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하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 관계를 가진 주치의와 개인 생활과 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 을 막고, 대형병원은 전문적인 업무

에 집중하게 돼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간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전국민 1~2%가 참여하는 점진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 제도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1차보건의료정책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가 10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 제2회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등 2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 유아교육 현장 보조인력 지원 '힘 모아'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시니어클럽 연계 방안 논의

도교육청과 전북도가 유아교육 현장 보조인력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10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 제2회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등 2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훈 부지사와 류정섭 부교육감을 비롯해 양 기관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건으로는 △202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안정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이 논의됐다. 그 결과 전북도는 242억 6630여 만

원을 도교육청에 진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체육교육내실화(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급식관리(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한 유치원 보조인력 지원 방안 마련에도 합의했다. 현재 도내 유치원의 경우 교사 1인이 단일연령 유아 14~22명까지, 3~5세 혼합연령 유아 16명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교사 수급조정은 교육부 권한으로 학급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방역 업무까지 겹치면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자원봉사자만으로는 유치원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도내 시·군이 운영중인 시니어클럽(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전북도에 협조 요청했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협의 후 순차적으로 연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지역교육을 위해 전북도청에서 항상 깊은 관심을 보내줘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노인 자원봉사자들과의 감성 교류를 통한 유아들의 안정된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훈 부지사는 "도청과 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국립해양문화시설, 자원 풍부한 전북에 건립 필요'

전북연구원 이수브리핑... "도민 해양문화 향유 기회 확대·균형발전 차원서 이뤄져야"  
4차산업·해양에너지 등 연계 해양과학관, 해양근대유산 박물관, 교통과학관 등 제안

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북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수브리핑 '바다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북,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통권 246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을 의미한다. 전북연구원 이수브리핑에 따르면, 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북에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없으면 해양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하고 있는 만큼,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해양문화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의 해안선은 548.5km이며,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3.7%(14,962.8km)를 차지하고 있고, 육지부 해안선 249.05km 중 자연 해안선은 40.4%인 공해안선은 58.8%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도의 바닷가 면적은 3.06㎢로 전

체 바닷가 면적(17.65㎢)의 17.3%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50.4%)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양 연안 11개 지역 중 전북도의 어촌체험 마을 이용객수 비율은 전국에서 4번째(12.1%)다. 이처럼 해양자원이 풍부한 전북에도, 해양이 있는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이 해양문화시설이 부재해 해양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국책기관의 경우도 지적한 바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해양수산부 역시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3~2023년)'에서도 해양문화시설이 전남·경북 등이 전체의 55.8%를 보유한 반면, 전북의 경우 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해 균형부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최근에 수도권권의 해양 문화 향유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인천박물관' 건립과 내륙권의 균형발전 실현 및 내륙 지역민의 해양의식 고취를 위해 청주에

미래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연구원 아동기 선임연구위원은 "전북은 해양자원이 여건 및 자원의 우수하고, 미래 해양문화 관광의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해양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발전 차원 측면에서도 국립해양문화시설이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연구원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4차산업 및 해양에너지 등을 연계한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근대유산 박물관, 국립미래해양교통과학관(또는 박물관)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한편, 전북의 해양은 역사적으로 중요 어장을 보유해 어업 경제 및 해양문화 생활권을 형성했으나, 해양문화시설의 불모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해양문화체험 및 접근성에 차별을 받고 있어 해양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지역이다. /유호상 기자

## 신복지 정책 일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본격 추진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실시될 경우 이용자들  
의료서비스 질 개선 향상"



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말하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집 주변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신뢰 관계를 가진 주치의와 개인 생활과 병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의 부실을 막고, 대형병원은 전문적인 업무

에 집중하게 돼 보다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간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기에는 전국민 1~2%가 참여하는 점진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 제도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과 보건복지부 1차보건의료정책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의료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